



재정긴축과 경기불안 악순환 속에 정치적 반발 확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독일이 주도한 재정긴축 정책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반발하고 있음.

- 프랑스에선 정부 지출 확대,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,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협약 재협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꺾고 승리하였음.
- 네덜란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내각은 사퇴의사를 표명,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.
 - 연간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¹⁾을 둘러싼 연립정권 구성 정당들 간 이견
 - 연정 해체는 불가피하며 하원 해산, 과도 관리 내각 인선, 조기 총선 등이 시작될 전망

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됨으로써 유럽 내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름.

- 프랑스, 네덜란드 등의 정치적 반발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최근 악화되면서 힘을 얻음.
 - 마켓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5개월 최저치인 47.4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하락하였고, 독일의 4월 제조업 PMI지수 역시 3월의 48.4에서 크게 하락한 46.3을 기록하여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.
 - 재정긴축과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초래될 우려가 대두됨.
- 뉴욕타임스는 긴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요구가 커지면서 독일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함.

(Financial Times, New York Times 등 4/23)

1)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이 4.7%였던 네덜란드 연립 정권은 2013년까지 유럽연합(EU)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재정적자 비율 3% 기준을 맞추려면 150억 유로 규모의 예산 감축이 필수라고 봄.